

## 고위직 회전문 인사(관피아)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volving door' problem and Corruption

오 필 환(Oh, Phil Hwan)\*

####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valent 'revolving door' problem in our society and the capture problems of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by the corporates which are doing projects connected to government. The sources of the problems which focused in this paper are based on the 'Public Officers' Ethics Law' and the ethical attitudes of public officers. Therefore, I tried some suggestions to complement the weakness of the Law and educational contents of public officers.

Key words: Revolving door, Gwanpia, Public Service Ethics Act

## I. 들어가면서

세월호의 아픔이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공직의 관행과 부패고리가 얽여 있는 필연적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 뿌리 박고 있는 관피아, 회전문 인사, 부패의 고리를 통한 이익의 추구를 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악덕 기업의 행태이다. 당시의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는 퇴직 후 민간기업, 법무, 회계,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만 취업승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공단, 공사, 재단, 국책연구원 등 공공기관이나 조합, 협회 형태로 된 비영리단체는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았다.<sup>1)</sup> 이러한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당시의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 등에 취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전문성을 살린 취업도 결국은 그들의 윤리성 문제로 민관유착의 수뢰와 편법 봐주기 행태로 이어져서 대형 사고로 초래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형화된 종교집단의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여 착취와 재산축적을 일삼은 것과

\* 백석대학교

1) 서울신문, 자정고, 2014. 5.14

기술적, 윤리적 판단력 부족이라는 여러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사고였다.

관피아란 공직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시절에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에 재취업하여 재취업 전에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거나, 재취업 후에 현직의 공직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이나 기관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 관료 마피아를 줄여서 관피아로 부르고 있다. 회전문 인사란 기업에 근무하던 사람이 관련된 전문성 때문에 관료로 임명되고 관련된 전문직책을 수행하다가 그 업무와 관련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른바 회전문 식으로 돌고 도는 인사행태를 말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간에 떠돌던 ‘관피아’에 대한 논란은 1년을 넘기면서 잊혀져가는 이슈로서 관심 밖의 흘러간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부패사건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행태가 현재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고위직 퇴직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사기업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재취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영능력을 높이려는 측면보다는 그들의 경력과 Network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기관, 사학재단의 방패막이 내지는 로비 활동을 하여 불법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공직자들이 보임된 한국선급은 일반선급 등록 및 유지 관련업무와 선박 도면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 검사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선박 안전을 위한 각종 검사와 해양오염방지 항만관리 등의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매우 해양 안전에 결정적인 감독기관이며,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으로 설립된 기구인데, 해양 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의 퇴직 후 준비된 자리처럼 여겨져 왔다. 물론 전문성을 가진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해 할 만하지만, 이 자리에 간 퇴직한 공직자들이 일말의 양심과 공정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고는 물질에 더러워진 왜곡된 종교가 기업을 이용하여 퇴직 공직자들과 결탁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손을 놓아버린 비극적인 사건이며, 국민은 세금으로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악덕 기업주와 기업은 사라져버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관피아적 회전문 인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책논문으로 시도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사고들을 잊어버리고 동일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되길 바란다.

## II.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20년 이상 한 분야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재취업을 찬성 하는 입장에서는 장기간 한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성을 사장 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나 다른 연관된 분야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퇴직 공직자라고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직업선택과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공복으로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던 자리에서 은퇴한 공직자가 기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개인의 경제적 활동보장이 우선인가 아니면 공직자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갖는 권한과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자유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딜레마인 것이다.

고위직 공직자의 퇴직 후에 재취업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공직생활에서 취득한 업무 정보를 가지고 어느 한 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정보의 독점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되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 정보는 그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정보는 일부 누구의 편익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재취업이 합리적인 제한 없이 개방되어버리면 재취업을 위하여 현직에 있을 때에 연관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인허가 과정이나 정책의 특혜를 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기업이 일정기간 재취업을 보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 현직에 있는 후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재취업한 기관에 유리하도록 정책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기업이나 민간 기관에 가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다.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호하지 않는 것과 수직적 조직문화에 숙달되어 있어서 혁신과 변화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이들을 활용하여 관계와의 언론을 소통하고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협회나 조합 등의 관련 기관을 만들어서 퇴직하는 공직자들을 그곳에 연장 재취업시키려는 제식구 감싸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15,000개에 이를 정도이라니 실로 놀라운 것이다.

이런 우려와 가능성 때문에 퇴직 후에 3년간<sup>2)</sup>은 지난 현직에서 근무하던 부서<sup>3)</sup>의 5년간

2)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가 있기 이전에 2년간 재취업을 금지하였으나 이것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3) 2급이상은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의 할 때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심의 하는 것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함 (2015. 3)

업무가 재취업하는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공무원 윤리법은 제한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퇴직 후 외부 재취업과 달리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방형 직위제’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고위직책에 근무하다가 다시 기업이나 원소속기관로 돌아가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이다. 외부의 전문가 영입과 그들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전문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인데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연구된 바 있으나 아직은 국내의 적으로 깊은 연구 결과가 집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법률을 ‘회전문 법(Revolving Door Law)’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회전문법은 여러 가지의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본다).<sup>4)</sup> 회전문법으로 민간간에 전문가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미래에 재취업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간의 서로 교류의 폭을 줄이거나, 혹은 공직자의 전문성을 사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더욱이, 회전문법은 미래의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유능한 공직자들의 조기 은퇴가능성을 높이며 신입공직자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서 비효율적 공직에서의 업무 진행이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자의 봉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공직자가 민간기업이나 기관에 포획될 가능성에 대한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리자의 봉급이 포획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의 봉급보다 높은 경우는 포획될 가능성이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 연구에서는 선출된 관리자들이 임명된 관리자들보다 민간 기업의 피관리부서에 포획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5)</sup>

공공부문과 기업 사이의 회전문 인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회전문인사가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제한하면 경제와 정치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을 하는데 Kowalewski, Leitko & Leonard의 연구에 의하면 회전문 인사가 허용될 때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아무런 실증분석결과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회전문 인사가 전직 공직자가 가진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뇌물을 주는 경향과 매우 높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6)</sup>

Meghani & Kuzma는 산업과 정부 관리부서간의 회전문 인사가 공공의 신뢰와 공정한 대표성의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장한다<sup>7)</sup>. 그러나, 회전문 인사가 비록 여러 가

4) Marc T. Law and Cheryl X Long, “Revolving Door Laws and State Public Utility Commissioners”, *Regulation & Governance* (2011) 5, 405-424

5) Basley T. and Coate S, “Elected vs Appointed Regulator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 (2003), 1176-1206

6) Kowalewski D., Leitko T. & Leonard R., “Revolving Doors, Corporate Performance, and Corruption of Markets”, (미국내의 상위 200개 기업의 3,815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임)

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치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식약청 같은)의 경우에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전문 인사제도가 참여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회전문 인사는 전문성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과 적은 정보를 가진 분야로 인재가 이동하여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성의 실체가 의심되고 단지 권력의 로비활동요원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시장이나 공공기관의 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지닌 것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백분 고려하더라도 그 인재가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정의감,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 철저한 시민정신교육을 심화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 철저히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부족한 상태이어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회전문 내지는 관피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현황 분석

#### 1. 공무원 윤리강령 내용

현재 법률 제 11873호 공무원 윤리법 제17조에 의하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2급이상)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로 두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sup>8)</sup> 공직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에 개인의 자유 및 권리와 공익의 추구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매우 모호한 결정을 하게 하기 때문

7) Meghani Z. & Kuzma J., "The Revolving Door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Industry: A Problem That Requires Reconceptualizing Objectivity", *J Agric Environ Ethics* (2011), 24: 575-599

8) 이때, 사기업이라 함은,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과 법인이나 단체, 연간 외형 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관련 업무라 함은 직접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을 배정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인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관계 되는 경우,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관계 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감독하는 업무,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 이거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 되는 업무, 등이 해당된다.

미국은 공무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재취업의 기회를 영구히 제한하거나, 독일은 퇴직후에 3년간 재취업을 금하고 위반시에는 연금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음

에 합법적인 회전문 인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동 법률 18조의 2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국가 안보상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 2. 관련 법령으로 제한된 사항들

사기업에 취업한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매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검토하고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업무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면밀히 검증하는 체계가 매우 미약하여 신뢰를 떨어뜨린다.

공직자 윤리법 18조의 4항에 의하면 모든 퇴직한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법 18조 5항에는 공직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에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업제한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동 공직자 윤리법 제 29조에 의하면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취업하여 받는 보수가 이때의 벌금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은 사실상 잘 지켜지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다.<sup>9)</sup> 또한 과태료나 벌금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부담하는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벌조항이다.

현 정부는 2014년 공직사회의 개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인사부문을 분리해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공무원윤리법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취업제한에 관한 개정내용으로는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재취업여부를 확인하기위한 기관을 확대하기로 하여 현재는 단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국한되어 있던 임의 취업자 확인요청기관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물론, 주식백지신탁, 업무취급제한, 재산등록 수시신고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역시 혁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9) 이때,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하지 않고 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각각 5천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공직자의 해태의 빌미를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 문화일보, 2015. 11.6, 뉴스깊이보기, 공직자 윤리법개정안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직의 개방은 개방형 직위제와 경력 개방형 직위, 그리고 민간 추천제 등이 있다. 이것은 공직에 민간의 다양한 전문성을 도입하여 공직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로 인해 현재 민간출신 국과장급 공무원의 40여 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1)</sup>

### 3. 퇴직공직자의 취업(관피아)와 회전문 현상

참여연대에서는 2006년 이후에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용실태 보고서”<sup>12)</sup>를 발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전 공직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이 업무 관련 기관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매년 수 백명씩 취업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에게 30일 전까지 취업 예정서를 제출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의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임의 취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sup>13)</sup> 중앙정부 17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후에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이 되어 활동 하는 관피아 (관료 + 마피아) 는 2014년 5월 현재 384명으로 집계되었다.<sup>14)</sup> 이렇게 많은 숫자가 관련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은 그 기관이나 협회를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직자가 가장 많은 것은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을 가진 기관이므로 이들이 은퇴 후에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검찰직 퇴직자 중에도 35%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sup>15)</sup>

중앙정부 부처 46개의 개방형 직위는 2012년에 311개 였는데 2015년에는 431개로 대폭 증가하였다.<sup>16)</sup> 이 개방형 직위는 민간에게 공직을 개방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기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충원율은 2015년 현재 63.1%로 매우 낮으며 특히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보임 된 것이 약 70% 정도가 된다. 이것은 민간에게 직위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인재를 보임하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약하며, 공직자들의 회전문 인사로 마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해당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보임되고

11)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5.12.14

12) 참여연대, 매년 발표된 자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보고서” 참조

13) 장관후보들도 수시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 2013년 조달청장을 지내고 은퇴한 K씨는 공직자취업제한기간 (2년)을 못넘기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도 없이 모 회계법인에 취업해서 4개월에 20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사실이 장관청문회에서 드러났다.(문화일보, 2015.11.6.)

14) 동아일보 2014, 05.12. 이 통계에는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에 재취업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감사원, 일선 지방자치단체 주요 간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등을 포함하면 관피아 숫자는 더 늘어 날 것이다.

15) 머니투데이, 2015. 09.10

16) 연합뉴스, 2015.09.11 “이 에리사 의원 개방형직위 3명중 2명은 공무원”

그 전문성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본부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고도의 투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임되어야 마땅하나, 퇴직 관계부서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등이 취업하는 자리로 알고 있어서 투자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영마인드도 부족하여 연금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연금이나 공제회 등의 투자 전문성이 떨어지는 퇴직 공무원의 자리 나누어주기 행태가 이루어지니 자연히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기금의 부족현상이 생기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 사회는 책임을 지는 인사가 아니라 아니면 사표내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이 전횡하고 있다.

\* 각 부처별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2014. 5월 현재)<sup>17)</sup>

(단위: 명)

산업통산 자원부	농림축산 식품부	국토 교통부	해양 수산업부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고용 노동부	법무부
64	42	42	35	32	31	27	27	24

교육부	안전행정부	통일부	미래창조 과학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15	12	11	9	5	4	2	2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의가 없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2015년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협회 등은 취업심사가 면제되었으며 113개 이상의 협회가 해당된다. 이렇게 많은 협회나 비영리법인도 퇴직 공무원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지고 있어서 비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이 2015년도 개정되면서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비영리 법인도 포함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 S 장관은 교육부 차관-대학총장-교육부 장관을 연이어 재임하는 회전문 인사의 표본이었다. 이러한 고위직 뿐 아니라 대학의 여러 가지 행정직의 보직을 갈 수 있고, 대학 교수로 채용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 공직자가 대학의 여러 가지 보직에 보임되는 것은 업무의 연관성이 분명하며 이를 제한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수직으로 가는 것은 제한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명칭만 교수로 보임하여 대학의 교원정원수를 채우며, 교직원으로 활용하면서 교육부와의 관계를 중개하는 역할로 이용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17) 세계일보, 2014. 5.12,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실 자료

18) 세계일보, 2014.5.6, '감시시각에 뚫린 공직자 윤리법'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의 전직 의원 및 주요 국회의 행정관리도 공공기관, 대기업, 협회, 대학 및 연구소에 무차별적으로 취업했으며 이들의 수는 수 백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재취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권력을 이용하여 자리를 만들어가는 관행은 도를 넘는 수준인 것이다.

해외에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관피아적 행태보다는 전문가들의 회전문 인사가 보편적인 행태이다. 특히 금융기관에서의 회전문은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여론이 “뉴욕의 월가 은행들과 정부기관 사이에 직장을 옮겨 다니는 회전문 인사는 예전부터 많았으며 골드만 삭스의 별명 중 하나가 정부 삭스일 정도이다”<sup>19)</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EU)의 감시기구인 ‘유럽기업감시(CEO)’는 EU의 장관격인 집행위원 이상급 전직관료들의 재취업을 분석한 결과 전직 집행위원들이 퇴임 후 기업과 단체 등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모두 115개이다.<sup>20)</sup> 이중에 특히 직전 집행위원26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한 곳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CEO는 주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취업비율이 높고 이들이 퇴임이후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소위 ‘회전문 인사’ 관행과 부패추문이 심각하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회전문과 관련한 부패와 비리의 관행을 종식하고자 지난 10월 중국의 “중국공산당 기율처분 조례”을 개정발표하고 9000명의 고위직 당원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5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의 청와대 퇴직 공무원 중 13명이 공직자 윤리법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해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sup>21)</sup> 청와대의 수석비서관4명, 비서관 1명, 행정관 8명 등 13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 사립대학, 각종협회 등에 재취업했음을 알 수 있는데, 로펌, 기업 등과 공직에 회전문 인사형태와 업무연관성이 분명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의 행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MB 정부의 L 법무부장관, C 고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 기업이나 법률회사에 임의 취업을 하였으며, 검찰의 전체 퇴직자중 35%가 취업제한여부를 심의 받지 않고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에 임의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는 추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까지 받았던 것이다.<sup>22)</sup>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이러한 관피아의 원조격이다.

19) 국제, 미국 중남미 [www.hani.co.kr/arti/print/714772.html](http://www.hani.co.kr/arti/print/714772.html) 조기원기자

20) 연합뉴스, 2015. 11.4 ‘EU 집행위 회전문인사 심각’

21) 네이버 블로그, 최민희 의원실 분석자료, [blog.naver.com](http://blog.naver.com) 2015.10.23. (청와대가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직자 윤리위의 취업심사결과자료에 근거.)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윤두현 전 홍보수석은 케이블 TV 방송협회 회장으로, C 미래전략수석은 LS 산전의 상근 고문으로, Y 전 미래전략수석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된 것 등임

22) KNS 뉴스 통신, 2015. 9.15

## IV. 개선 방향

### 1. 현황분석

퇴직한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내지는 관련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재취업의 불협화음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퇴직자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처벌 조항이 약하기 때문이며 공직자 윤리법의 제한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공직자 윤리법의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본다.

### 2. 취업제한 기간관련 사항

2015년 3월 31일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비영리분야의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취업이력공시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던 것을 퇴직 후 고위공직자는 10년간 취업이력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에 그 효력은 유효하겠으나, 누가 얼마나 그 취업이력을 분석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그 유효성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관련성 범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변화가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공직자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자발적인 보고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통제 제도 자체가 모호하며 누가 그 퇴직공직자를 모니터 할 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따라서, 퇴직 후에 현재 공직자 윤리법이 규정하는 3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심이 흐려 질 때 회전문 인사로 재취업할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퇴직 후에 취업한 기업이나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기업이나 그 기관에 취업취소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공직자가 임의 취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과태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며, 대부분 이 과태료도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 지불하게 된다.<sup>23)</sup>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통령은 공직자 은퇴 후에 취업제한 기관을 4,000개에서

23) 실제로 역대 연봉을 받은 전법무부장관 L씨는 과태료 400만원을 선고 받는데 대부분의 과태료가 경형상 100만원- 500만원 수준이하이었다.

12,000개로 확대하고,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와 관련되는 곳의 기관장과 감사는 공무원을 더 이상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sup>24)</sup>

그러나, 기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취업제한기간이 3년으로 제한 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하는 것을 우려한다. 2년의 제한기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배로 늘리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 하니 1.5배정도로 늘린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취업제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공직자의 정보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판단일 텐데 우리나라의 조직문화 속성상 그 영향력과 정보의 독점의 크기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취업연관 부서에는 아주 영구히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서 재취업기관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원봉사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도 필요하다고 본다.

\* 2015년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에 관한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문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취업제한 기관확대	영리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과 직결된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이상의 사회복지법인</li> <li>*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 자본금 10억이상, 년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으로 하향조정</li> <li>* 국가, 지자체가 업무 위탁하거나 임원 임명, 승인하는 협회도 포함</li> </ul>	신설
취업제한 기간	* 퇴직후 2년	* 퇴직 후 3년으로 연장	연장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퇴임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 퇴임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	기관확대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기관, 취업기관, 직위 등 공개</li> <li>* 취업심사 결과 통지 후 공개</li> </ul>	신설

공직자 윤리법에는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퇴직 공무원이 관련 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다.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몇가지 예외조항이 인정되는 것은 전문직의 전문성활용과 취업대상자의 개인의 취업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예외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심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공직에 있다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가는 소위

24) 서울경제, 2014.05.1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법피아’, 전문집단의 회전문 인사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굴레에 막혀서 제한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위직 관점사도 다른 공직자의 취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취업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전문성은 공직에 근무한 후에 후학을 양성하거나, 자원봉사자로서 법률상담 내지는 법률 지원 업무를 자원봉사하는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한 공직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자원봉사하는 제도와, 이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센터를 행자부에 설치하여 고위직 퇴직자들이 남은 여생을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3.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조항이다.

지금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의 경우에 취업해제요청을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 각 기관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30조 3항 3호)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퇴임 공직자 재취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에 비해 너무나 적은 비용이라고 판단되면 이 해임요청에 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처벌인 것이다.

만일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취업이 제한 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29조 제1호) 과태료만 부과하는 위반자 처벌수준이 그 위반자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에 비하여 너무 약하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취업이 불가하다고 판정받고도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2006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두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sup>25)</sup>

법조인 출신으로 국무위원 경력을 거친사람이 다시 회전문 인사로 로펌에 가는 경우에 변호사로 일하면서 J 국무총리출신은 24개월동안 6억 이상의 보수를, H 법무장관은 15억 이상의 보수를 받은 실적을 보여준다.<sup>26)</sup>

이러한 미약한 처벌조항은 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rent seeking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처벌이 있도록 경험적인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재취업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재취업이 적발 되었을 때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더욱 무겁게 강화 되어야 실효를 찾을 수 있다. 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 된 것처럼 공무원 윤리강령의 위반 중 회전문 인사에 대한 취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25) 중앙일보, 2014. 6.16

26) 스페셜경제, 2014. 6.11

에 처벌의 수위를 구체화하고 더 강화하여서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취업이력공시제도의 신설

취업이력공시제도는 2014년 12월 공직자 윤리법 개정시 신설된 제도인데, 2급이상의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재취업하는 경우에 10년동안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취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도 역시 처벌 조항이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재취업자나 재취업기관이 취득하는 편익에 준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 4.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법 제9조1항).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265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시군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7명(시군구3명) 임명위원 4명(시군구2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각 위원회별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처리, 법위반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여부확인 및 승인 등이며 취업이력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사실 공직자들의 제2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 하며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그 기관이 속한 지역과 기관에서 이러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식구의 투명성 심의를 가족에게 맡긴 격이 되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정부기관별로 매우 다른 기준과 해석을 가지고 이들을 심의 평가하게 되어 공정성이 매우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윤리위원회의 중앙부처화하여 특정 기관에서 전문성을 연구하고 일관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자료의 정리 및 보고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중앙 윤리위원회는 심의 내지는 현장 실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여부를 승인하는 기관이 각 부서별로 별도로 실시하여서 ‘제식구 챙기기’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독립된 기구에서 이일을 담당하여 전문성도 개발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심의회는 상식선상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비전문직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수준높은 공직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동네 및

사람이 모여서 검토하고 좋은게 좋다는 식의 안이한 판단과 심의는 우리 공직사회와 우리나라의 청렴문화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다. 따라서, 이 부서를 전문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기구 개편과 보완이 필요하다.

## 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는 취지가 공무원들이 기업의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해서 공직사회에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대기업을 포함하여 이를 확대 활성화 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비리와 민관유착의 고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본다.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으며, 돌아와서도 어떤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직사회의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현재의 분위기와 상부 계층의 행태로 보아서 새로운 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층부의 전략적 정책결정권자이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관련된 민관유착의 결과만 가져오는 또 다른 형태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 질 것임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공여지책을 지닌 공직 사회의 한계가 분명히 느껴진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혁신을 원한다면, 공직 사회의 개방형 직위를 더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영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자치 공무원의 징계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았으나, 이번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통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sup>27)</sup>

그러나 지나친 인센티브의 제공은 사기 진작이 아니라 눈치보기, 눈에 보이는 성과주의, 열매 따 먹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같이 검토하여 실제적인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는지를 진단하여야 한다.

## V. 마치면서

세계적으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추세에서 공직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신분을 보장하였으므로 이를 남용하거나 이를

27)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성폭력이나 뇌물에 관한 사항 등이 더욱 강화되었다. 심지어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성, 금품 비위와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나눠먹기 하는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하였다.

이용한 개인의 사익의 추구가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은 권력과 책임이 막중하게 주어져 있어서 항상 부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직자 자신의 양심과 이성애 입각한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사회의 기업이나 여러 기관에서 그들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들은 전문가 윤리마저 돈 몇푼에 팔아먹어버리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정의감이 있었다면, 이러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으며, 우리 사회는 보다 행복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 여부를 떠나서 퇴직 전에 시민윤리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퇴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서 모범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퇴직 전 시민의식교육은 현재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랜 공직생활에 배인 '갑'의 입장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갖추기에는 비용이 매우 높다 하겠다. 공무원교육원이 현직 공무원 교육만이 아니라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사회로 내보내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추가한다면 우리사회가 밝아질 것이다.

또한, 명예롭게 공직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남이 잘 찾지 않는 곳, 금전적 수익이 높지 않은 곳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명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의 맘모니즘으로 찌들은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논문의 성격을 갖지만, 향후에 회전문 내지는 관피아적 인사의 부패와 관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들의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관피아적 인사의 효용성과 필요성,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들을 더 소상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Marc T. Law and Cheryl X Long, “Revolving Door Laws and State Public Utility Commissioners”, *Regulation & Governance* (2011) 5, 405-424
- Basley T. and Coate S, “Elected vs Appointed Regulator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 (2003), 1176-1206
- Kowalewski D., Leitko T. & Leonard R., “Revolving Doors, Corporate Performance, and Corruption of Markets”,
- Meghani Z. & Kuzma J., “The Revolving Door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Industry: A Problem That Requires Reconceptualizing Objectivity”, *J Agric Environ Ethics* (2011), 24: 575-599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5.12.14
- 문화일보, 2015. 11.6, 뉴스깊이보기, 공직자 윤리법개정안
- 참여연대, 매년 발표된 자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보고서” 참조
- 동아일보 2014, 05.12.
- 연합뉴스, 2015.09.11 “이 에리사 의원 개방형직위 3명중 2명은 공무원”
- 세계일보, 2014. 5.12,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실 자료
- 머니투데이, 2015. 09.10
- 세계일보, 2014.5.6, ‘감시시각에 뚫린 공직자 윤리법’
- 중앙일보, 2014. 6.16
- 스페셜경제, 2014. 6.11
- 서울경제, 2014.05.1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투고일자 : 2015. 12. 11

수정일자 : 2015. 12. 29

게재일자 : 2015. 12. 31



<국문초록>

## 고위직 회전문 인사(관피아)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오 필 환

이 논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관피아적 고위공직자 퇴임후 재취업문제와 회전문 인사에 대한 현실문제를 분석하고 이의 원인을 제도적인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으로 보고, 공직자 윤리법의 보완방향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보완 방향, 퇴직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을 논의한 정책논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특별히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다.

주제어: 회전문인사, 관피아, 공직자 윤리법